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길

For the Good of the Country and Welfare of the People

Column

되살아난 망령 - 시공업체의 설계겸업

새해 벽두부터 시공업체의 설계겸업이라는 망령이 되살아나서, 그렇지 않아도 생사기로운 허덕이는 우리 건축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년 전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관계자들을 설득했는가? 이제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는데 또 다시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제도개선 방향의 하나로써 제기되었음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시공회사의 논리를 그대로 규합한 이들의 논지를 보면 한마디로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제한으로 턴키공사에서 불합리성을 유발시키고,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과 공법이 설계에 원활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건설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이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된 의견이 국리민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위원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국가와 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현대의 민주국가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의거, 통치자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러나 왕정시대의 권력은 세습에 의한 왕권에서 나왔다. 왕은 왕권천수설을 주장하였기에 이 두 권력상태는 완전히 상반된 현상 같아 보이나, 실제로 왕권시대에도 민심은 천심이라든가, 백성이 하늘이라고 하여 민심을 사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국민 없는 국가는 없으며 민복을 게을리 하여 민심이 떠나고 망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직이다. 이는 WTO 양허각서상의 분류에서도 건축설계 분야가 전문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과대학이 6년이며 수련의 과정을 거치듯이 건축사도 시공과 달리 5년의 수업과정과 인턴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이렇게 전문직들은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에 의해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사회가 전문직에 부여한 특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위신과 존엄성, 확고한 업무범위와 자주적인 결정에 따른 권위, 높은 수준의 보수, 합리적 판단 능력의 인정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바, 실무수행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공정성 유지,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의 옹호 그리고 개인의 이익에 앞선 공공의 복지와 이익 존중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와 국가가 인정한 전문직으로서 건축사가 국민에게 지는 의무는 일정부분에서 동일한 것이다.

건축사와 시공자의 차이점과 육성방안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작품에 대하여 창의성과 작품성 그리고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와 감리를 행하는 자이며, 시공자는 경제성과 기술력 그리고 상업성(주변,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한 공공성에 반하는 의미로서 개별 건축물에 치중함을 의미)에 치중하는 근본적 특성이 있다. 한마디로 설계는 '무엇을 만들까'가 목적이며 시공은 '어떻게 만들까'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육성방안 또한 건축사사무소는 창의성,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건축문화의 창달과 설계능력 배양을 통한 설계의 질 향상 및 관련 전문기술 분야의 협력체제 개발에 두어야 할 것이며, 건설회사는 시공기술 개발을 통한 건설 수준의 향상, 관리능력 배양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그리고 공종별 전문 시공업체와의 협력체제 개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시공회사와 건축사 그리고 국민을 위한 길이며, 중국적으로 국가를 위한 길임에도 규제개혁기획단의 제도개선 검토 방향은 앞서 기술한대로 민복을 도외시 한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학회와 건축가협회는 한 목소리로 이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즉, 턴키공사에서 불합리성을 유발시킨다는 점에 대하여도 현상설계를 하는 외국의 일반적, 보편적 사실을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월드컵 상암경기장의 성공적 사례를 들었다. 미국의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의 설계겸업에 대한 것도 미국의 벡텔이나 파슨스가 건설회사가 아닌 CM회사임을 밝혔으며, 기타 사항에 대한 것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의 모순성과 부당성을 통박하였다.

무엇이 국민복인가?

위와 같은 우리 협회의 주장은 진정으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함에도 협의나 토론 문화는 실종되고 흑백논리가 판치는 요즈음의 세태로 보면, 자칫 건축사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나 소위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기술자와 설계 업무를 하는 건축사를 함께 길러내는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된 건축학회까지 동일한 선상에 서 있다면 우리의 주장이 그렇지 않음을 그들도 이해하리라 믿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복의 차원에서 시공회사의 설계검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근세조선이 500년 이상의 단일왕조를 유지한 것은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한다. 이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언로(言路)의 확보를 통한 3사의 역할에 있다고 한다. 즉 사간원, 사헌부 등 관료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감시 감독 기관이 세 개나 있고, 이들은 임금의 칼에 죽거나 귀양을 가도 할 말은 하는 언로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썩지 않았고, 그렇기에 50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계와 감리 기능을 가진 건축사사무소가 시공회사에 속한다면 감시 감독 기능은 없어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일당독재의 공산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 연유하며, 현존하는 국가형태 중 가장 이상적이라는 민주주의가 삼권이 분립하여 상호 견제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필자는 호주의 상징이 캔거루에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로 바뀌었다든가, 캄보디아 국기에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다거나, 사양산업으로 죽어가던 도시하나가 건축물 하나로 유명해져 다시 활기를 찾는다든가 고차원의 말로 그들을 주눅 들게 하거나 예술론과 작품성을 따져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따로 논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이나 혜안이 없다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국민복을 위해 주장하는 경제적 논리로 풀 때도, '검증이 가장 안 좋다'는 말만은 꼭 재언(再言)하고 싶다.

이것이 곧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존중하여야한다'는 전문가로서 건축사인 우리가 반대하는 대의명분이며, 국가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충정임을 밝힌다. ■